



NABO 재정동향&이슈

NABO Fiscal Trends & Issues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외 10건

해외재정동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



-
- 「NABO 재정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 02-6788-377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재정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2년 Vol. 2 통권 제20호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 3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9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1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20
-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 26
- 2023년도 정부 주요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 30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 / 34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최초비행 성공 발표 / 38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현황 / 42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 47
-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실시 / 50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54
-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 58
-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 62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 65

해외재정동향 / 6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70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74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 / 77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총수입 · 총지출

2022년도 6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5.8조원 증가한 334.4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3.1%p 감소한 54.9%

- 총수입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기금수입이 3.0조원 감소한 반면,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각각 36.5조원, 2.2조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2년도 6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3.6조원 증가한 409.4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3.1%p 증가한 60.2%

- 총지출의 증가는 주로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0조원) 지급 조치 등으로 예산 및 기금 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22.2조원 증가, 기금 지출은 35.2조원 증가

2021 · 2022 회계연도 총수입 · 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2022(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6월 (누계, B)	진도율 (C=B/A)	2차 추경 (D)	6월 (당월)	6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	514.6	570.5	298.6	58.0	609.1	40.7	334.4	54.9	35.8	△3.1
• 국세수입	314.3	344.1	181.7	57.8	396.6	21.7	218.3	55.0	36.5	△2.8
• 세외수입	29.3	30.5	16.4	56.0	28.3	2.0	18.6	65.7	2.2	9.7
• 기금수입	171.0	195.8	100.4	58.7	184.1	16.9	97.4	52.9	△3.0	△5.8
(사회보장성기금) ¹⁾	99.5	124.5	65.6	66.0	104.8	10.0	60.2	57.4	△5.4	△8.6
◆ 총지출	604.9	601.0	345.8	57.2	679.5	66.9	409.4	60.2	63.6	3.1
• 예산	409.7	398.9	238.5	58.2	449.8	45.6	257.9	57.3	19.5	△0.8
– 일반회계	348.8	339.7	197.6	56.6	388.2	38.2	219.8	56.6	22.2	△0.0
– 특별회계	60.9	59.1	40.9	67.1	61.6	7.4	38.1	61.9	△2.7	△5.2
• 기금	195.2	199.6	105.0	53.8	229.7	21.2	140.2	61.0	35.2	7.2
(사회보장성기금)	63.2	64.4	33.1	52.4	64.4	5.5	33.3	51.7	0.2	△0.6
• 세입세출외	-	2.6	2.3	-	-	0.0	11.2	-	8.9	-

주: 1) 국민연금 · 사학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2022.8.)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2022년도 6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5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27.8조원 확대되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1.9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22.2조원 확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0조원) 등 제2회 추경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연말까지 제2회 추경 계획 범위(관리재정수지 △110.8조원) 내에서 관리 예정

* 2022년 5~6월 중 제2회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원(예비비, 교부세(금) 제외) 중 32.1조원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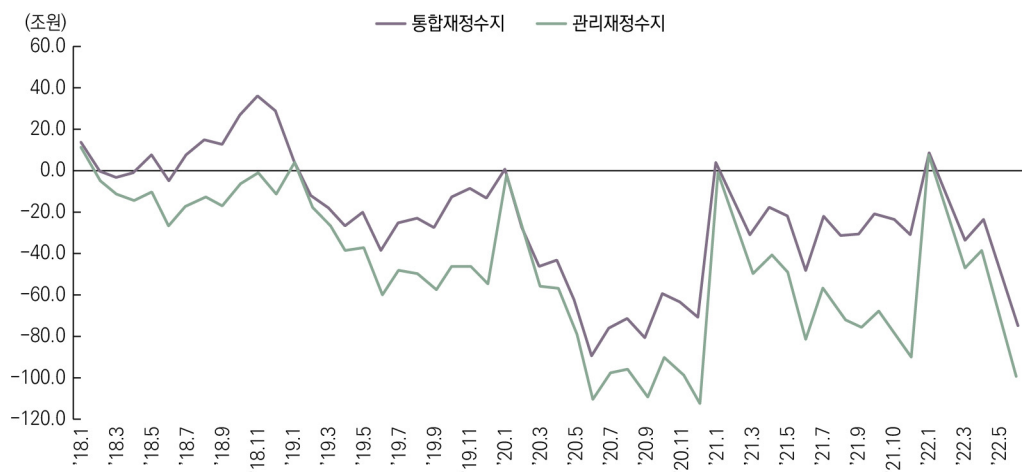
2021·2022 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2022(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6월 (누계, B)	진도율 (C=B/A)	2차 추경 (D)	6월 (당월)	6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A)	514.6	570.5	298.6	58.0	609.1	40.7	334.4	54.9	35.8	△3.1
◆ 총지출(B)	604.9	601.0	345.8	57.2	679.5	66.9	409.4	60.2	63.6	3.1
◆ 통합재정수지(C=A-B)	△90.3	△30.5	△47.2	-	△70.4	△26.1	△75.0	-	△27.8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36.2	60.1	32.5	-	40.4	4.5	26.9	-	△5.7	-
◆ 관리재정수지(E=C-D)	△126.6	△90.6	△79.7	-	△110.8	△30.7	△101.9	-	△22.2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2022.8.)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2022.8.)

국가채무

2022년도 6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007.5조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939.1조원 대비 68.4조원 증가

-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¹⁾은 2021년 45.6%로, 2020년 42.4% 대비 3.2%p 상승

2020~2022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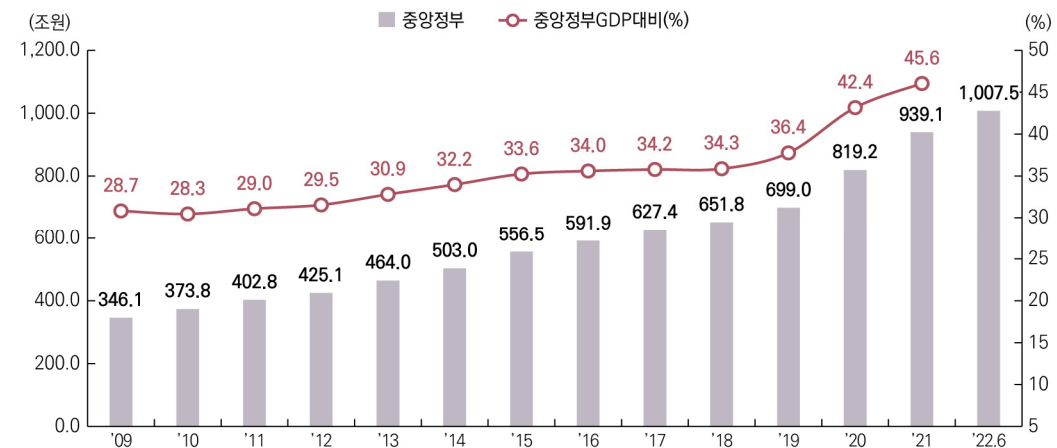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 분	2020	2021	2022(잠정)		
	결산	결산(A)	2차 추경	6월(B)	전년 결산 대비(B-A)
◆ 중앙정부 채무	819.2	939.1	1,037.7	1,007.5	68.4
• 국채 ¹⁾	815.2	937.0	1,035.8	1,005.5	68.5
- 국고채권	726.8	843.7	937.5	910.3	66.6
- 국민주택채권	78.9	82.2	85.9	83.2	1.0
- 외평채권(외화)	9.5	11.2	12.3	12.0	0.8
• 차입금	3.3	2.0	1.9	2.0	0.0
• 국고채무부담행위	0.7	0.1	0.1	0.1	0.0

주: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이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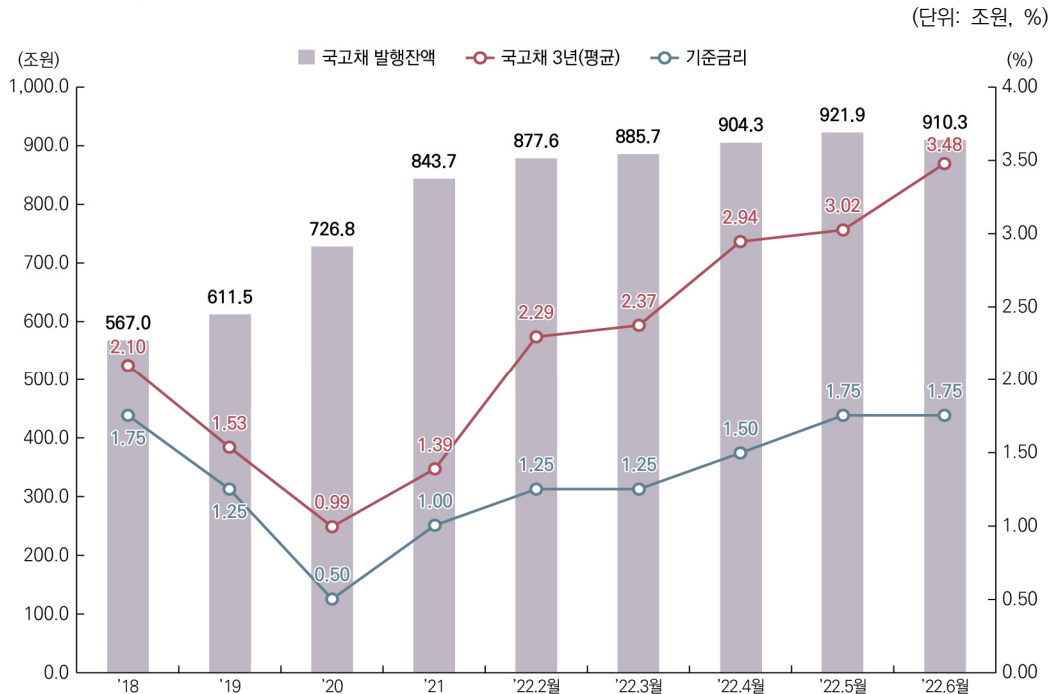
1) 2022년의 경우, GDP가 확정되지 않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



2022년도 6월말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 규모는 910.3조원으로, 2021년말 843.7조원 대비 66.6조원 증가

- 국고채 금리(3년 만기 기준) 및 기준금리는 2020년 기준 각각 0.99%, 0.50%로 최하점을 기록한 이후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 추세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3년) 금리 및 기준금리 변동 추이



주: 1. 국고채 발행잔액은 국고채 총 발행액 중 총 상환액을 제한 금액으로,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누적 합계를 의미함

2. 국고채 금리 및 기준금리는 해당 기간 중 평균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 ◆ 2023년도 정부 주요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
-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최초비행 성공 발표
-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현황
-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 ◆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실시
-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 ◆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 ◆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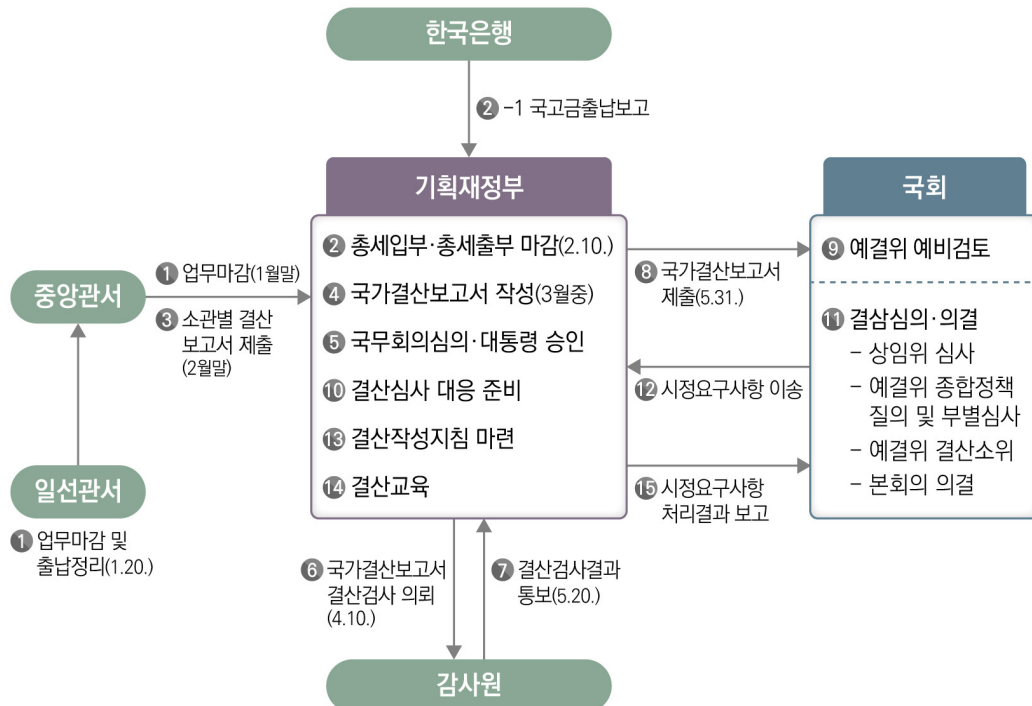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2022. 5. 31.)

● 국가결산보고서 개요

- (국가결산 체계)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56조 내지 제61조, 「국가회계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국가결산 체계





● 국가결산 관련 보고서 구성

- (국가결산보고서)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¹⁾되며,
 - 국가채무·채권·물품·국유재산보고서 등은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하여 재무제표 부속서류로서 제출됨
-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국회 의결을 받은 예비비를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사용하고 그 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임

국가결산 관련 보고서 구성

1.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 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

(참고자료)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 결산개요(통계편), 성인지결산서(부처 종합본),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사업별 집행명세서, 기금 재무제표, 정부기업특별회계및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재무제표

2.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 정부는 2022. 4. 6.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2022. 5. 31. 국회에 제출하였음

1)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과 등을 요약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결산결과를 종합
 재무제표: 회계·기금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을 종합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 및 목표 달성 현황 분석

세입·세출 결산내역

● 총세입·총세출 결산 총괄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524.2조원, 총세출은 496.9조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0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3조원이 발생함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합 계	524.2	496.9	27.3	4.0	23.3
일반회계	438.4	417.7	20.6	2.6	18.0
특별회계	85.8	79.1	6.7	1.3	5.3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일반회계

- (세입 실적)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438.4조원으로 예산액 380.9조원 대비 57.5조원 (15.1%)이 초과수납 되었는데, 이는 국세수입에서 예산 대비 58.5조원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예산 대비 △0.9조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전년도 실적에 대비하면 총 46.0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세수입은 56.2조원 증가, 세외수입은 △10.2조원 감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 산(B)	실 적(C)		
총세입	392.4	380.9	438.4	57.5	46.0
국세수입	276.3	274.0	332.5	58.5	56.2
세외수입	116.1	106.8	105.9	△0.9	△10.2

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세출 실적)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25.9조원 대비 98.1%인 417.7조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 32.5조원(8.4%) 증가하였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0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실적 (C)	집행률 (C/B)*100	
일반회계	385.2	425.9	417.7	98.1	32.5

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특별회계

- (세입 실적) 20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대비 6.8조원 증가된 85.8조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2.7조원이 증가된 규모임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73.1	79.0	85.8	6.8	12.7
기타특별회계(15)	62.1	67.7	72.9	5.2	10.8
기업특별회계 (5)	11.1	11.3	12.9	1.6	1.8

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세출 실적)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3.3조원의 95.0%인 79.1조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0.5조원이 증가된 규모임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0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실적 (C)	집행률 (C/B)*100	
합 계	68.6	83.3	79.1	95.0	10.5
기타특별회계(15)	58.2	72.0	68.5	95.1	10.3
기업특별회계 (5)	10.4	11.4	10.7	94.2	0.3

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기금 결산

-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등 총 67개임
 - 기금은 운용성격 및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재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 등 4가지²⁾로 분류됨
- 2021회계연도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836.4조원으로 기금계획 대비 25.8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47.5조원이 증가하였음
 - 기금 가운데 수입·지출액 규모가 큰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268.3조원), 국민연금기금(191.2조원), 외국환평형기금(91.4조원), 주택도시기금(83.1조원) 등임

2021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계획대비 (C-B)	2020년 대비 (C-A)
			기금계획(B)	결 산(C)		
수 입	자체수입	176.6	190.8	196.6	5.9	20.0
	정부내부수입	218.4	183.6	208.8	25.2	△9.6
	차입금	200.8	226.8	229.7	3.0	28.9
	여유자금회수	193.0	209.5	201.3	△8.2	8.2
합 계		788.9	810.6	836.4	25.8	47.5
지 출	사업비	163.0	197.4	186.2	△11.2	23.2
	기금운영비	2.8	2.9	2.8	△0.1	0.1
	정부내부지출	262.8	262.4	250.1	△12.3	△12.7
	차입금원금상환	92.2	102.6	95.8	△6.8	3.6
	차입금이자상환	20.0	21.9	20.6	△1.3	0.5
	여유자금운용	248.1	223.6	281.0	57.4	32.8

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있고, 재정성기금은 어떤 목적의 자금 역할을 위한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있으며, 금융성기금은 금융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이 있고, 사업성기금은 사업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8개가 이에 해당됨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결산

-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도 예산안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지표임
- 2021년도 총수입은 추경 대비 55.9조원 증가한 570.5조원 수준이며, 총지출은 추경 대비 4.0조원 감소한 600.9조원을 집행하였음
 -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59.9조원 개선된 30.4조원 적자를 시현하였음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36.1조원 개선된 90.5조원 적자를 시현하였음

2021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D-B)
	추경 (A)	결산 (B)	추경대비 (B-A)	추경 (C)	결산 (D)	추경대비 (D-C)	
I. 총수입	470.7	478.8	8.1	514.6	570.5	55.9	91.7
II. 총지출	554.7	549.9	△4.8	604.9	600.9	△4.0	51.0
III. 통합재정수지(I-II)	△84.0	△71.2	12.8	△90.3	△30.4	59.9	40.8
IV.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6	40.8	6.2	36.2	60.1	23.9	19.3
V. 관리재정수지(III-IV)	△118.6	△112.0	6.6	△126.6	△90.5	36.1	21.5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

2.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순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가채무

- 「국가재정법」 제91조에 따른 2021년 말 국가채무는 967.2조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120.6조원 증가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3.2%p 상승하였음('20년: 43.8% → '21년: 47.0%)
 - (국가채무의 구성)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채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국채가 국가채무의 96.9%(937조원)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채무 증가요인) 국가채무가 2020년 대비 120.6조원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채 증가(121.8조원) 때문임. 정부는 국가채무가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 및 경기 회복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제시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0 결산 (A)	2021		2021 추경대비 (C-B)	2020 대비 (C-A)
		추 경(B)	결 산(C)		
국 가 채 무	846.6	965.3	967.2	1.9	120.6
(GDP 대비)	(43.8)	(47.3)	(47.0)	(△0.3)	(3.2)
◦ 국 채	815.2	935.5	937.0	1.6	121.8
- 국고채권	726.8	846.2	843.7	△2.5	116.9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5	10.9	11.2	0.3	1.7
- 국민주택채권	78.9	78.4	82.2	3.8	3.3
◦ 차입금	3.3	2.3	2.0	△0.2	△1.2
- 국내 차입금	3.3	2.3	2.0	△0.3	△1.3
- 해외 차입금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7	0.1	0.1	0.0	△0.6
◦ 지방정부 순채무	27.5	27.5	28.1	0.6	0.6

주: 2021년 지방정부채무는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잠정치(지방자치단체 결산 이후 확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

- 2021회계연도말 기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39.9조원, 부채는 2,196.4조원이고, 순자산(자산-부채)은 643.5조원임
 - 자산은 전년 대비 352.8조원(14.2%), 부채는 전년 대비 214.7조원(10.8%)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8.1조원(27.3%)이 증가함

자산·부채 구성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1 (A)	2020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산합계(a)	2,839.9	2,487.1	352.8	14.2
Ⅰ. 유동자산	566.0	504.0	62.0	12.3
Ⅱ. 투자자산	1,167.9	1,015.3	152.6	15.0
Ⅲ. 일반유형자산	705.6	604.1	101.5	16.8
Ⅳ. 사회기반시설	382.6	347.9	34.7	10.0
Ⅴ. 무형자산	2.5	2.0	0.5	25.0
Ⅵ. 기타비유동자산	15.3	13.8	1.5	10.9
부채합계(b)	2,196.4	1,981.7	214.7	10.8
Ⅰ. 유동부채	187.9	167.9	20.0	11.9
Ⅱ. 장기차입부채	756.1	658.5	97.6	14.8
Ⅲ. 장기충당부채	1,199.4	1,102.6	96.8	8.8
Ⅳ. 기타비유동부채	53.0	52.7	0.3	0.6
순 자 산(a-b)	643.5	505.4	138.1	27.3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주요 시사점

- 국가채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6.0%에서 37.6%로 1.6%p 증가했으나, 2020년은 43.8%로 전년 대비 6.2%p, 2021년은 47.0%로 전년 대비 3.2%p 증가함
 -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자 국채를 발행한 것으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국세수입: 세수오차금액 및 오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최근 5회계연도 간 국세수입 세수오차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세수입 예산	본예산 기준(A)	245.8	272.1	287.2	284.1	282.7
	추경예산 기준(B)	251.1	268.1	294.8	279.7	314.3
국세수입 결산(C)		265.4	293.6	293.5	285.5	344.1
세수오차금액	본예산 기준(C-A)	19.6	21.5	6.3	1.4	61.4
	추경예산 기준(C-B)	14.3	25.4	△1.3	5.8	29.8
세수오차율	본예산 기준{(C-A)/A}	8.0	7.9	2.2	0.5	21.7
	추경예산 기준{(C-B)/B}	5.7	9.5	△0.4	2.1	9.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각 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최근 5회계연도(2017~2021년도) 간 국세수입 세수오차 현황을 보면, 오차금액은 2017년 19.6조원, 2018년 21.5조원, 2019년 6.3조원, 2020년 1.4조원, 2021년 61.4조원으로 2021년에 최근 5회계연도 중 가장 큰 오차를 보였고, 오차율 역시 2017년 8.0%, 2018년 7.9%, 2019년 2.2%, 2020년 0.5%, 2021년 21.7%로 2021년에 최근 5회계연도 중 가장 큰 오차율을 보였음
- 각 연도 추경예산 기준으로 최근 5회계연도(2017~2021년도) 간 국세수입 세수오차 현황을 보면, 오차금액은 2017년 14.3조원, 2018년 25.4조원, 2019년 △1.3조원, 2020년 5.8조원, 2021년 29.8조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오차율 역시 2017년 5.7%, 2018년 9.5%, 2019년 △0.4%, 2020년 2.1%, 2021년 9.5%로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오차금액이 가장 크고 오차율도 높았음



- 특히 2021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세수입 예산을 31.5조원 증액경정하였음에도 추경예산 대비 초과수납 규모가 총 29.8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증액경정 규모와 초과수납 규모를 합하면 본예산 국세수입 기준 세수오차율은 21.7%에 달하였음
- 2022년도에도 정부는 당초 추계한 규모보다 실제 국세수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세수입 예산을 53.3조원 증액경정하는 등 현재까지도 세수오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세수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국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하반기 방역 소요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2.6조원 증액된 6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편성배경 및 목적
 - 정부는 ①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② 방역 소요 보강 및 방역체계에서 향후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뒷받침, ③ 고유가·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8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편성
- 심사경과
 - 국회는 5월 16일 상임위원회 상정 개시,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을 거쳐 5월 29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 재원 및 규모
 - 추경안 규모는 59.4조원이며, 재원은 초과세수 44.3조원,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 8.1조원, 지출 구조조정 7.0조원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재원 및 규모

(단위: 조원)

재원		규모	
• 초과세수	44.3	• 세출 증액	59.4
•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8.1		
• 지출 구조조정	7.0		
합계	59.4	합계	59.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주요내용: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26.3조원, '방역 보강' 분야에 6.1조원, '민생·물가안정' 분야에 3.1조원, 예비비 보강 1.0조원,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이 편성되었음
 - '소상공인·취약계층' 분야에 편성된 26.3조원은 손실보전금(23.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1.5조원), 금융지원(1.7조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0.1조원)으로 구성
 - '방역 보강' 분야에 편성된 6.1조원은 방역소요 보강(3.5조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2.6조원)으로 구성
 - '민생·물가안정' 분야에 편성된 3.1조원은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1.7조원), 특고·택시기사·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1.1)조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0.3조원),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0.1조원)으로 구성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편성목적별 세부내역

(단위: 조원)

구분	주요내용	규모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손실보전금	23.0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5
	금융 지원(신규·대환 대출, 채무조정)	1.7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
	소 계	26.3
방역 보강	방역소요 보강	3.5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2.6
	소 계	6.1
민생·물가안정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1.7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1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0.3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0.1
	소 계	3.1
	예비비 보강	1.0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
	총규모	59.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6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확정

● 심사결과

-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 범위 확대, 고용·소득지원금 단가 인상, 하반기 방역 소요 보장 등을 위해 세출증액 기준 정부안 59.4조원보다 2.6조원 증액한 62.0조원으로 의결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

(단위: 조원)

구분	규모		재원					
		세출증액	계	초과세수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기금재원	기타 ¹⁾
추경안(A)	68.4 ²⁾	59.4	68.4	53.3	7.0	4.6	2.1	1.4
증 액(B)	1.1	2.6	1.1	-	△0.2	-	0.5 ³⁾	0.8
국회확정 (A+B)	69.5 ⁴⁾	62.0	69.5	53.3	6.8	4.6	2.6	2.2

주: 1) 정부안에는 한국은행잉여금 1.4조원이 반영되었고 국회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8,000억원) 증액

2) 국고채 원금 상환 9.0조원 포함

3)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0.5조원 공자기금 추가 예탁

4) 국고채 원금 상환 추경안 9.0조원에서 7.5조원으로 1.5조원 감액

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총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5조원, 제2회 추경안 대비 0.8조원 증액된 609.1조원
- 총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2조원, 제2회 추경안 대비 2.8조원 증액된 679.5조원
- 통합재정수지 전망치는 △70.4조원,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110.8조원
- 국가채무(D1) 전망치는 1,068.8조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조원 감소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 재정총량 변동

(단위: 조원)

구분	본예산	제1회추경(A)	제2회추경안(B)	제2회추경(C)	제1회추경예산 대비 증감 (C-A)	제2회 추경안 대비 증감 (C-B)
총수입	553.6	553.6	608.3	609.1	55.5	0.8
총지출	607.7	624.3	676.7	679.5	55.2	2.8 ¹⁾
통합재정수지	△54.1	△70.8	△68.5	△70.4	0.3	△1.9
관리재정수지	△94.1	△110.8	△108.8	△110.8	0	△1.9
국가채무(D1)	1,064.4 (50.0)	1,075.7 (50.1)	1,067.3 (49.6)	1,068.8 (49.7)	△7.0 (△0.4)	1.5 ¹⁾ (0.1)

주: 1) 세출증액 2.6조원 + 지출구조조정 복원 0.2조원을 합한 금액
 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감액 내역

● 주요 감액내역

-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사업 1,000억원 감액 등 총지출 기준 6개 세부사업에서 1,023억원 감액
- * 다만,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현물 출자 추진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 주요 감액 내역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사업명	추경안 증액분(A)	증감(B)	국회 확정 증액분 (A+B)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7,000	△1,000	6,000

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주요 증액내역

- 손실보상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 확대, 특고·프리랜서·예술인 및 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단가 인상,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진단검사비 등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 주요 증액내역

(단위: 억원)

	증액 항목	주요 증액사유	추경안 증액분 (A)	증감 (B)	국회 확정 증액분 (A+B)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대 (연 매출 30억원 → 50억원 이하) - 손실보상 지원대상 확대 (기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15,000	1,420	16,420
	소상공인 금융 지원	- 소상공인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2.3조원) 확대	7,200	1,800	9,000
	특고·프리랜서·예술인 지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단가 인상 (100만원 → 200만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단가 인상 (100만원 → 200만원)	7,416	8,300	15,716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	- 소득안정자금 단가 인상(200만원 → 300만원)	3,226	1,613	4,839
	매출회복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2.5조원) 추가 발행	-	1,000	1,000
방역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상	- 적정 수준 병상규모 유지 위한 손실보상 소요 보강	17,186	4,346	21,532
	진단검사비 등	-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소요 보강	16,293	5,227	21,517
민생·물가 안정	생활물가 안정 지원	- (농산물)비료가격 상승분 국고지원비율(10% → 30%)확대	600	1,201	1,801
		- (축산물)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 지원(적용금리 1.8% → 1.0% 인하) 확대	65	46	111
		- (수산물)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5개월) 지원	-	239	239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	- 초대형 산림헬기(1대) 조기 도입	-	55	55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627개소) 설치	-	20	20
		- 산불전문진화차량(8대) 확충	-	30	30

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부대의견

-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17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부대의견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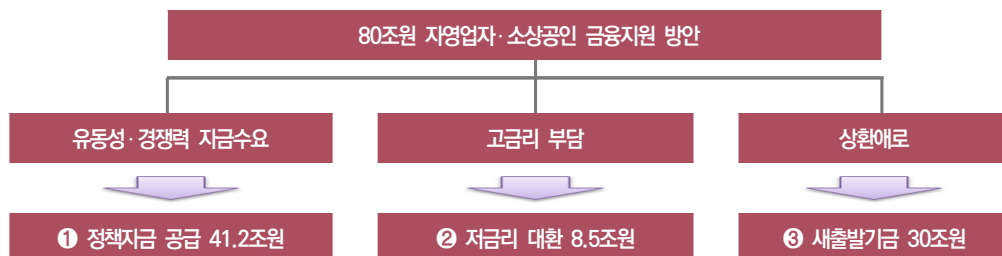
-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한시적으로 강원도 소방본부 헬기의 정식 도입(2024.6월) 이전까지 헬기 임차료의 50%와 경상북도 산불진화용 헬기(1대) 도입단가(500억원)의 50%를 연차별로 지원한다.
- 정부는 용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 집행과정을 관리한다.
-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말 종료예정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일시상환 부담이 없도록 연착륙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금융권과 추가 연장 조치를 협의하며,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코로나 19 피해 등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질병관리청은 격리리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진단검사비·장례지원비 등 방역 관련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함에 있어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되,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감소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이·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조정된 아래 SOC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한 사업기한 내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에 필요한 적정 소요를 반영한다.
 - * 사업명: 태백-미로2-2국도건설, 남면-정선국도건설, 여주-원주 복선전철, 세종-안성고속도로건설, 충청내륙1국도건설, 평택-오송 2복선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 충청내륙2국도건설, 북일-남일1국도건설,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동읍-한림국도건설, 고성-통영 국도건설, 안동-영덕, 도담-영천 복선전철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2022. 7. 25.)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한 프로그램 도입 추진」(2022. 8. 11.) 발표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이 크게 악화
 - 소상공인의 70.8%가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2022.1.)
 - 업황 악화위기 대응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대출의 구조적
질 악화
 - * 개인사업자 원화대출잔액: (2019년말) 692.7조원 → (2020년말) 809.7조원 → (2021년말) 916.0조원
 - ** 개인사업자대출 중 은행권 대출 증가율(26%),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46%)
- 2022. 7. 14.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80조원 규모의 근본적·맞춤형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 결정
 - 금융지원 방안 추진방향을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도모
 -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2022. 7. 25.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및
2022. 8. 11.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한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발표
 - *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상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은 2022년 8월 중 발표 예정

새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개요



자료: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보증(3.25조원 공급)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2,200억원으로, 나머지 38조원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자체재원으로 공급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개요

맞춤형 자금지원 2년간 41.2조원 공급	→	유동성 공급	10.5조원	대출	7.2조원	보증	3.3조원
	→	경쟁력 강화	29.7조원	대출	18.3조원	보증	11.4조원
	→	재기지원	1.0조원	대출	0.5조원	보증	0.5조원

-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공급(3.25조원),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유동성 자금 공급(2.1조원) 계획
 -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2022. 1.~)의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 NICE 개인신용점수 920점 이상인 방역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1천만원 한도로 연 1.5%의 신용대출 공급
→ 손실보전금(2022. 5.) 수급자를 대상에 추가하고, 지원한도를 3천만원까지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은행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 개편·신설
 -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비대면 대출 공급(1,000억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자금 등 자금 공급(18.0조원)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 확장, 서비스업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운전·시설 자금 등에 대한 보증 지원(11.3조원)
-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3,000억원)
-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 플랫폼 내 데이터(거래패턴, 일별 매출액 등)를 활용하여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추진(1,000억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2,200억원),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리부담 경감하는 기업은행 재창업 우대프로그램 도입
 - 신용보증기금 자체,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한 프로그램 도입 추진」의 주요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도입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평균매출액 10~120억원 미만인 법인 소기업
 -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또는 2022. 6월말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업종, 금융업, 약국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대환대상) 대환신청 시점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로서 2022. 5. 31.까지 취급된 대출
 -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보험사의 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 (프로그램) 최대 6.5% 보증부 대출로 전환(8.5조원)
 - 재원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6,800억원으로 조달

대환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 분	대환 프로그램 내용
대환 규모	총 8.5조원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 21.9조원의 약 40%(사업자·소기업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비중 고려)
상환 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 리	기간별 상환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차) 은행 기준 최대 5.5% 고정금리 -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2022. 8. 9. 기준 은행채 1년물(AAA) 평균금리 3.428%
차주당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보증비율	90%
보증공급방식	금융기관 위탁보증

자료: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사전 위험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금번 금융지원 방안의 대상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경영상 애로가 있어 자금공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저신용자로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경우가 대부분
 -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여력 부족에 따라 대출 및 보증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건전성 위험 발생
 - 과거 소상공인 대상 위탁보증, 바퀴드림론 사례를 고려할 때 금번 금융지원 상 대출·보증은 일반 대출·보증 대비 부실률이 높을 것으로 우려
 - * 2021년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은 2.0%인데 반해, 2020~2021년 시행한 소상공인 위탁보증(2년 거치 3년 상환)의 경우 2021년말 거치기간임에도 대위변제율이 1.17%이었으며, 2022년 3월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2.0%에 이릅니다
 - ** 국민행복기금의 바퀴드림론(2008~2019년)의 경우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꾸주는 대환대출로, 누적 대위변제율이 17.1%에 이릅니다
- 대출 및 보증 부실로 인해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및 보증의 면밀한 관리, 특례보증에 대한 별도 관리 등 사전 위험관리 방안 마련 필요

2023년도 정부 주요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
(2022.6.28.)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통보하는 "주요 R&D"와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일반 R&D"로 분류

- 주요 R&D 사업은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국공립(연) 주요사업비·기관운영비, 국방 R&D 등으로 2022년 전체 R&D 예산 29.8조원 중 81.2%인 24.2조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주요 R&D사업의 예산(안)은 2022년 예산인 24조 2,363억원보다 4,238억원(1.7%) 증가한 24조 6,601억원 규모

※ 최근 5개년 주요R&D 예산 규모(조원) : ('18) 14.7 → ('19) 16.5 → ('20) 19.7 → ('21) 22.5 → ('22) 24.2

-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28개 부처 1,19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수는 56개 증가하였으며, 196개(0.7조원)의 세부사업을 신규로 반영
-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4조원(3.2% 증), 산업통상자원부 5.4조원(2.2% 증), 해양수산부 0.8조원(6.2% 증) 등 17개 부처의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된 반면, 방위사업청 3.1조원(1.3% 감), 중소벤처기업부 1.7조원(0.5% 감), 보건복지부 0.7조원(0.5% 감) 등 11개 부처는 전년대비 감액

부처별 주요R&D 예산 반영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률	부처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1,506	94,465	3.2	산업통상자원부	52,949	54,088	2.2
방위사업청	31,586	31,185	△1.3	중소벤처기업부	17,151	17,059	△0.5
해양수산부	7,695	8,174	6.2	농촌진흥청	6,502	6,962	7.1
보건복지부	6,991	6,954	△0.5	국토교통부	6,045	5,808	△3.9
교육부	5,484	5,294	△3.5	환경부	3,858	3,990	3.4
농림축산식품부	2,625	2,481	△5.5	산림청	1,382	1,364	△1.3
기타 16개 부처	8,589	8,777	2.2	합계	242,363	246,601	1.7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p.17

2023년도 주요 R&D사업 중점 투자 분야 및 효율화 주요 내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3년 주요 R&D사업의 중점 투자 분야로 ①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②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③ 과학기술 인재양성, ④ 기업·지역 주도 국가혁신역량 강화, ⑤ 국민 체감 성과창출 등을 제시하고, 해당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

2023년도 주요R&D 정책 분야별 예산 배분조정 결과

(단위: 억원, %)

분야	세부 기술분야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률
①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10,178	10,962	7.7
	반도체·디스플레이	4,510	4,895	8.5
	이차전지	757	992	31.1
	차세대원전	198	297	50.5
	수소	2,895	2,908	0.5
	5G·6G	1,864	1,945	4.3
②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21,532	23,944	11.2
	첨단바이오	6,379	6,930	8.6
	우주·항공	7,411	8,392	13.2
	양자	669	953	36.3
	인공지능·로봇	6,791	7,585	11.7
③ 과학기술 인재양성	인재양성	5,416	5,672	4.7
	창의·자율 기초연구	25,488	25,784	1.1
④ 기업·지역 주도 국가혁신역량 강화	중소·중견 기업 R&D	15,086	15,710	4.1
	지역 R&D	10,331	9,659	△0.1
⑤ 국민 체감 성과창출	디지털 전환	20,652	24,210	17.2
	재난안전	22,126	22,482	1.6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①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7.7% 늘어난 1조 962억원의 예산을 배분

-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 펌리스 기업 지원 등의 산업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
- (이차전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 양성을 지원
- (차세대원전)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

- (수소) 수소 생산, 저장, 충전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저탄소 발전, 산업 연·원료 대체 등 수소 활용처 다변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 (5G·6G) 6세대(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5세대(5G) 개방형 네트워크, 5G특화망 등 5G 산업 기반 강화 지원

②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11.2% 증가한 2조 3,944억원의 예산을 배분

- (첨단바이오)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개발 중점 투자
- (우주·항공)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양자) 한국형 양자컴퓨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 탐색연구 및 적용연구 지원
-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

③ **과학기술 인재양성**: 국가 필수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 지속 확대

- (인재양성) 주요 정책분야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국내외 인재 교류 등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전년대비 4.7% 증가한 5,672억원의 예산을 배분
- (기초연구) 창의자율성 바탕의 기초연구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1% 증가한 2.58조원 지원

④ **기업·지역 주도 국가혁신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기업의 기술 혁신역량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전략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전년대비 4.1% 증가한 1.57조원, 지역R&D로 0.96조원의 예산을 배분

⑤ **국민체감 성과창출**: 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 지원 확대

- (디지털전환) 제조·산업,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의 디지털 융합과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 촉진 지원에 전년대비 17.2% 증가한 2.42조원 투자
- (재난안전) 자연·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예측감자복구 등 전주기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소방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지원에 전년대비 1.6% 증가한 2.25조원 배분



- 이와 함께 정부는 R&D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국가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기반하여 전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 특히, 최근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한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업계 수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간 중복성, 기술혁신 로드맵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지출구조조정 실시
- ※ 탄소중립 R&D 투자는 2020년 1.59조원에서 2022년 2.25조원으로 연평균 19.0%씩 증가하였으나, 2023년 배분조정(안)은 2.33조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을 3.7% 수준으로 내실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다른 재정사업과 함께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표(2022.8.1.)

-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¹⁾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2~2026)」을 발표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정책 공모, 전문가·관계자·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 발표
-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은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비전으로, 4개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의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

4개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
모두를 위한 책	•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 공공수요 확대 • 글로벌 수요 창출
어디에나 있는 책	•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 출판유통 고도화 • 지역출판 활성화
미래를 향한 책	• 디지털 대응역량 강화 • 출판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출판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
책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출판정책 협력 및 홍보 강화 • 출판 전담기관 역량 강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수립 배경

- 주요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산업의 위상 유지 및 혁신 지원
 - 출판산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2020년 기준 21.6조원으로 국내 문화산업에서 방송산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16.9%)을 차지하고 있으나, 출판산업의 2016~2020년 연평균 매출액 증감률은 1.0%로 다른 산업에 비해 저조하여 출판산업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문화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방송	17,331	18,044	19,762	20,843	21,965	17.1	5.4	6.1
출판	20,766	20,755	20,954	21,341	21,649	16.9	1.4	1.0
지식정보	13,462	15,041	16,291	17,669	19,373	15.1	9.6	9.5
게임	10,895	13,142	14,290	15,575	18,885	14.7	21.3	14.7
광고	15,795	16,413	17,212	18,134	17,422	13.6	△3.9	2.5
캐릭터	11,066	11,922	12,207	12,567	12,218	9.5	△2.8	2.5
음악	5,308	5,804	6,098	6,812	6,065	4.7	△11.0	3.4
콘텐츠솔루션	4,584	4,852	5,095	5,361	5,635	4.4	5.1	5.3
영화	5,256	5,495	5,890	6,432	2,987	2.3	△53.6	△13.2
만화	976	1,082	1,179	1,337	1,534	1.2	14.7	12.0
애니메이션	677	665	629	641	553	0.4	△13.6	△4.9
합계	106,116	113,216	119,607	126,712	128,287	100.0	1.2	4.9

주: 2020년 매출액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기준 콘텐츠 산업조사」, 2021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변화 및 출판산업 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가활동 및 소비가 오프라인·대면에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표적 비대면 여가활동인 '독서'에 대한 관심 재환기
 - 출판유통 매출의 2015~2019년 연평균 증감률 현황에서 오프라인은 0.3% 감소한 반면 온라인은 12.5% 증가하는 등 온라인 서점 중심의 유통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자책 시장 성장, 독립출판 활성화 등 유통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대응 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출판유통 매출 현황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오프라인	5,011	4,975	4,889	4,923	4,950	0.5	△0.3
온라인	1,151	1,341	1,682	1,769	1,847	4.6	12.5
합계	6,162	6,316	6,571	6,693	6,796	1.6	2.5

주: 오프라인 매출은 각 연도 「콘텐츠 산업조사」의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수치임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년도 상반기 출판산업 동향」, 2022

- 매체(책)의 경계를 넘어 콘텐츠 지식재산²⁾ 중심으로 문화산업 패러다임 변화
 - 전통적 장르나 매체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약화되고 장르 간 확장·연계되는 트랜스미디어의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확장 가능성을 지닌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의 가치가 재조명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주요 내용

- (전략1) 모두를 위한 책
 -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서 출간 지원, 개별 독자의 요청에 맞추어 도서를 추천하는 북큐레이션 활성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소량 출판 시장 육성
 - (공공수요 확대) '세종도서 선정구입지원' 사업의 선정 도서 홍보 및 선정 규모 확대, '청소년 북토론 지원' 사업의 도서 구입 지원 대상 확대, 지역생활권 내 도서구입 확대 지원
 - (글로벌 수요 창출) 다른 콘텐츠로의 연계 진출 강화,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전략적 국제 출판교류 강화, 출판수출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적 출판 수출 지원체계 구축
- (전략2) 어디에나 있는 책
 -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지역서점의 시설개선 및 컨설팅 지원으로 책 경험 공간 고도화, 지역서점의 문화적 기능 확충,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자립기반 구축
 - (출판유통 고도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출판유통 데이터 고도화, 지역 거점 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 정보화 시스템 도입, 어음거래 등 위험도가 높은 거래 관행 개선
 - (지역출판 활성화) 책문화센터의 단계적 확대 등 지역출판 기반 조성 및 지원,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출판 콘텐츠 개발 등 지역 문화관광과 지역출판 연계

2) 콘텐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은 원천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 장르 및 산업 간 확장·연계 및 파생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 묶음을 의미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 지식재산(IP)과 가치사슬 변화 연구」, 2021)



● (전략3) 미래를 향한 책

- (디지털 대응역량 강화) 이종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출판 지식재산권 콘텐츠 확장 지원, 디지털 신유형 출판 생태계 지원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교육
- (출판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대학(원)과 출판업계 간 컨소시엄 구성, 멘토링 과정 운영 등 산학 연계 활성화, 대상별·수요별 출판 교육과정 체계화
- (출판 혁신기업 생태계 활성화) 출판산업 투자 재원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를 내실화하여 출판 스타트업 및 초기 기업 지원

● (전략4) 책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출판 개념의 범주 논의 및 다양한 문화산업 법률과의 연계성 검토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정비,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등 출판계 제도 정비
- (출판정책 협력 및 홍보 강화) 출판계-유통계-도서관계-작가계-독자 등 관련 주체가 참여하여 출판정책 상생 협력 강화, 다양한 출판정책의 통합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
- (출판 전담기관 역량 강화) 출판산업진흥원의 정책 연구 기능 및 통계 역량 강화, 출판물 불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

다양한 수요와 구조적 변화에 대응 가능한 출판산업 지원 필요

- 개인별 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지역 거점 기반 조성을 통해 출판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출판산업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분석을 통해 개인별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역 거점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통해 특수성 있는 출판 기반 조성 필요
- 출판산업이 장르 간 융합, 비대면·온라인 시장 확대 등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 필요
 - 출판산업이 영화, 영상, 웹툰 등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멀티미디어북 등 새로운 유형의 출판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최초비행 성공 발표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최초비행 성공 발표(2022.7.19.)

-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2022년 6월 최초비행 준비검토회의(FFRR¹⁾) 등을 거쳐 2022년 7월 19일에 최초비행을 성공하였다고 발표
 - 한국형전투기(KF-21) 개발 사업인 보라매 사업(R&D)은 2015~2028년간 8조 8,406억원을 투자하여 공군의 기존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차기 공군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
 - 2022년도 예산은 시제비 3,549억 3,200만원(78%), 시험평가비 789억 5,500만원(17.4%), 시설공사비 122억 7,700만원(2.7%), 사업관리비 67억 3,200만원(1.5%), 자산취득비 12억 4,300만원(0.3%) 등 총 4,541억 3,900만원 편성
 - 2021년 4월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국산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 개최, KF-21은 세계에서 8번째²⁾로 개발 중인 4.5세대³⁾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 최초비행 시간: (이륙) 15:40, (착륙) 16:13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 주요 추진 경과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은 20여년간 추진되어온 대한민국 공군의 미디엄(Medium)급⁴⁾ 전투기 개발사업인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결과물로, 초기에는 산업파급효과 대비 비용 과다소요로 해외구매가 타당하다는 의견(보라매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KDI, 2006)이 있었으나 국내 기술수준 향상, 해외수출가능성 등을 근거(보라매 사업 타당성 분석, 건국대, 2009)로 국내개발이 본격 추진

1) FFRR(First Flight Readiness Review, 최초비행검토회의)은 최초비행 진입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회의로, 비행준비분과와 비행안전분과로 구성되며 규격적정성, 비행시험 인원/시설/절차 준비상태, 항공기 안전기준 충족성을 확인함

2)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공동개발(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3) 세대 구분은 전투기의 발전사에 따른 것으로 세대별(기술적, 능력적) 특징으로 구분됨. 4세대는 고기동성, 정밀유도무기 운용 특성을 가지며 대표적으로 F-15, F-16 전투기가 있고 5세대는 항전장비의 향상과 스텔스 능력으로 특징되며 F-35, J-20, Su-57이 있음. 4.5세대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AESA레이다와 같은 항전장비는 5세대 급이나 스텔스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KF-21을 4.5세대로 구분

4)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의 전력 운영개념을 High, Medium, Low로 세분화하고 있음. High급 전투기는 적의 주력 전투기를 초전에 제압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최첨단 고성능 전투기이며, Low급은 지해상군 공중화력지원을 위한 근접지원작전을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전투기로서 High급 전투기 대비 성능이 한 단계 낮은 전투기임. Medium급의 전투기는 상황에 맞춰 High급과 Low급의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전투기라고 할 수 있음(High급 F-15K, F-35A, Medium급 KF-21, KF-16, Low급 F-5, FA-50)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 주요 추진 경과

구 분	주요 내용
2002. 11.	• 장기 신규소요 결정(제197차 합동참모회의)
2010. 4.	•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제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11. 6.	• 한·인니 공동탐색개발 실시
2014. 3.~10.	• 한·인니 국제공동연구개발 협상 및 기본합의서 체결
2014. 9.	• 한국형전투기 체계개발기본계획 심의·의결(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15. 12.	•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15. 12.	• 체계개발사업 계약 체결(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
2016. 3.~12.	• 체계요구조건검토(System Requirement Review) 및 체계기능검토(System Function Review) 수행
2017. 6.	• AESA 레이더 1차 중간점검 실시
2018. 3.	• AESA 레이더 2차 중간점검 실시
2018. 6.	• 체계기본설계검토(Preliminary Design Review) 수행
2019. 9.	• 체계상세설계검토(Critical Design Review) 수행
2022. 4.	• KF-21 시제 1호기 출고
2022. 7.	• KF-21 시제 1호기 최초비행

자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현황 및 부품 국산화 계획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8조 8,406억원으로, 이 중 방위사업청 예산 5조 3,729억원, KAI 분담금 1조 7,338억원,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7,338억원으로 구성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개발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이후	계
방위사업청	746	695	3,032	4,353	6,639	10,403	9,069	18,792	53,729
KAI분담금	11	982	1,417	1,731	2,354	2,536	1,781	6,526	17,338
인니분담금	0	500	1,841	1,987	1,907	2,081	1,994	7,028	17,338

자료: 방위사업청

- 한편, 방위사업청과 KAI는 한국형전투기(KF-21) 초도양산 1호기 가격⁵⁾ 기준의 65%에 달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KF-21 개발은 항공기체계, 군수지원체계, 훈련체계 등으로 구분되며 WBS(업무분할구조) 4단계 기준으로, 항공기체계 69개, 군수지원체계 9개, 훈련체계 7개 등 85개 품목을 국산화한다는 계획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 부품 국산화 계획

구 분	품목수	품목명
항공기체계	69	• AESA 레이더, EO TGP(전자광학표적 추적 장비),IRST(적외선 탐색 추적장치), HUD(전방상향시현기), 유압펌프, 비행제어컴퓨터, 배터리 등
군수지원체계	9	• 야전급 전용지원장비, 전자식교범(IETM), 무장관리장치시험장비(SMST) 등
훈련체계	7	• Simulator, CPT(조종실절차훈련장비), 정비훈련장비 등

자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 개발 성공의 의미
 - 공군이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갖게 됨으로써, 공군이 원하는 대로 성능 개량이 가능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 개발 장착 가능
 - 부품단종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해져 높은 작전 가동률 유지와 경제적 전력운용 가능
 -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항공분야 수출 생태계 조성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 개발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⁶⁾
 - (산업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24조 4,4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조 8,665억원 등 약 30.3조원으로 전망
 - (기술파급효과) 체화 기술파급효과⁷⁾ 45조 2,096억원, 비체화 기술파급효과⁸⁾ 4조 2,832억원 등 약 49.5조원으로 전망
 -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는 110,869명으로 전망

5) 2024년 양산사업계획 승인 이후 해당 업체와 계약 시 양산단가가 확정될 예정임

6) 무기체계연구원, 「KF-X 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7

7) 신기술에 의해 개발된 장비나 생산품들이 시장 안에서 산업 간 거래를 통해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파급 효과를 의미함

8) 특허나 기술정보의 불완전성에 따른 정보의 누출, 연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등에 기반을 둔 지식 정보의 흐름에 의한 지식파급 효과를 의미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를 위한 긴밀한 협의 필요

- 인도네시아 측에서 동 사업의 분담금을 2019년까지 2,272억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로, 자칫 자원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국비 및 민간업체의 자원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최근 한-인니 정상회담(22.7.28.) 시, 양국 정상은 공동개발사업 마지막까지 계속 협력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방위사업청과 인니 국방부는 양국 정상의 논의결과에 따라 분담금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추진한다는 입장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개발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7.	2022년 10월 이후	계
인니 분담금	500	1,841	1,987	1,907	2,081	1,994	867	6,161	17,338
납부액	500	452	0	1,320	0	0	0	미정	2,272

자료: 방위사업청

- 다만, 일부 언론보도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구매에 합의한 데 이어 미국산 F-15 전투기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분담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타국의 전투기를 구매함에 따라 동 공동사업에 대한 파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위사업청은 미납된 분담금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협의 필요

행정예산분석과 최형수 예산분석관(02-6788-4642)

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6068&ref=A>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현황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69.0조원, 통합재정지출은 284.9조원으로 재정수지는 15조 9,093억원 적자 예상¹⁾

- 통합재정수입은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0%(28.9조원) 증가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133.6조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여건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14%(16.4조원) 증가
 - 이전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131.8조원으로 국내세수여건 개선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 18.8%(9.3조원) 증가, 국고보조사업 확대²⁾에 따른 보조금 5.4%(3.8조원) 증가에 기인
- 통합재정지출은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9.8%(25.5조원) 증가
 - 사회복지 분야 87.6조원으로 전년대비 8.9%(7.2조원) 증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15.6조원으로 전년대비 22.9%(2.9조원) 증가, 교육 분야 전년대비 14.1%(1.9조원) 증가
 - 예비비는 유일하게 전년대비 2.3%(867억원) 감소
- 보전수입으로 분류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수입에 반영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조 4,812억원 적자로 예상
 - ※ 순세계잉여금은 보전수입으로 분류하여 통합재정수입에서 제외되었으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수입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Ⅰ)와 포함한 경우(Ⅱ)로 구분하여 작성함

1) 2022년 지방재정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규모는 2021년 예산안 편성 시의 예정 교부금 규모이며, 확정 교부된 이전재원 규모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을 통해 반영됨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04조 695억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6.8%(6조 6,101억원) 증가한 규모임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단위: 억원, %)

구분			2021(A)	2022(B)	증감	
					B-A	(B-A)/A
통합재정수지(Ⅰ)			△192,301	△159,093	33,208	△17.3
통합재정수입 ¹⁾			2,401,591	2,690,149	288,559	12.0
자체 수입	지방세		926,047	1,085,070	159,023	17.2
	세외수입		246,787	250,698	3,911	1.6
	소계		1,172,834	1,335,768	162,934	13.9
이전 수입	지방교부세		492,262	584,825	92,563	18.8
	보조금		694,886	732,739	37,853	5.4
	소계		1,187,148	1,317,564	130,416	11.0
융자회수등			41,609	36,818	△4,792	△11.5
통합재정지출 ²⁾			2,593,891	2,849,242	255,351	9.8
	일반공공행정		126,767	155,850	29,083	22.9
	공공질서및안전		47,985	51,419	3,434	7.2
	교육		137,836	157,329	19,493	14.1
	문화및관광		118,198	133,358	15,160	12.8
	환경		252,507	269,700	17,193	6.8
	사회복지		804,035	875,943	71,908	8.9
	보건		44,597	58,978	14,381	32.2
	농림해양수산		172,788	189,801	17,013	9.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2,879	93,510	10,631	12.8
	교통및물류		194,380	211,797	17,417	9.0
	국토및지역개발		157,224	157,470	245	0.2
	과학기술		3,338	3,968	630	18.9
	예비비		38,292	37,425	△867	△2.3
	인력운영비		330,228	347,215	16,987	5.1
	기본경비등			82,837	105,481	22,644
순세계잉여금			158,124	124,281	△33,843	△21.4
통합재정수지(Ⅱ)			△34,177	34,812	△635	1.9

주: 1. 각 연도 당초예산 기준

1) 통합재정수입(순계) = 일반회계 수입+특별회계 수입+기금 수입-보전수입(차입금, 지난연도 이월금 등)

2) 통합재정지출(순계) = 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 지출-보전지출(지방채상환, 다음연도 이월금 등)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평균 통합재정자립도는 49.6%, 통합재정자주도는 72.0%로 낮은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재정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통합재정자립도는 2019년 51.3%, 2020년 50.6%, 2021년 49.2%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49.6%로 소폭 증가하였음
 - 총 243개 지자체 중 통합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227개(93.4%)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취약성이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서울 본청 74.9%)와 가장 낮은 지자체(전북 본청 24.5%)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서울 강남 67.9%)와 가장 낮은 지자체(경북 양양 6.7%) 간 편차도 크게 발생함
- ※ 통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함(경상수입+자본수입+융자회수)/통합재정수입*100)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균	48.4					26.9		
	74.9	47.6	67.9	39.3	37.1	33.4	13.4	26.2
최고	74.9	55.1 인천 본청	67.9	56.0 경기 본청	37.1	64.4 경기 성남	38.5 울산 울주	67.9 서울 강남
최저	서울 본청	40.5 광주 본청	세종	24.5 전북 본청	제주	10.2 경북 상주	6.7 경북 양양	10.9 대전 동구

주: 총계예산 규모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통합재정자주도는 2019년 72.8%, 2020년 72.7%, 2021년 70.3%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72.0%로 증가하였음
 - 총 243개 지자체 중 통합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곳이 54개로 22.2%를 차지함
 - 광역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서울 본청 75.5%)와 가장 낮은 지자체(전북 본청 39.5%)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경기 과천 81.1%)와 가장 낮은 지자체(부산 북구 26.6%) 간 편차도 크게 발생함
- ※ 통합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 중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의존재원'의 비율을 의미함(경상수입+자본수입+융자회수+이전수입(보조금 제외))/통합재정수입*100)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평균	57.9					57.7		
	75.5	61.3	74.3	48.4	69.5	62.5	61.8	43.5
최고		67.0 울산 본청	74.3 세종	56.9 경기 본청	69.5 제주	81.1 경기 과천	69.0 강원 양양	70.1 서울 강남
최저	75.5 서울 본청	56.8 부산 본청		39.5 전북 본청		54.7 전북 익산	54.6 대구 달성	26.6 부산 북구

주: 총계예산 규모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있어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존재하며, 세외수입의 불안정성과 쏠림 현상이 지속됨

-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40.3%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3.0%에 달하고 있음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단위: 단체수)

구분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계	243	17	75	82	69
해결	145(59.7%)	17(100.0%)	61(81.3%)	14(17.1%)	53(76.8%)
미해결	98(40.3%)	0(0.0%)	14(18.7%)	68(82.9%)	16(23.2%)

자료: 행정안전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단위: 단체수)

구분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계	243	17	75	82	69
해결	187(77.0%)	17(100.0%)	70(93.3%)	36(43.9%)	64(92.8%)
미해결	56(23.0%)	0(0.0%)	5(6.7%)	46(56.1%)	5(7.2%)

자료: 행정안전부

-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26조 8,533억원)로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특별시·광역시와 시에 집중(71.5%)되는 것으로 나타남

2022년도 세외수입 총규모 현황(총계)

(단위: 억원, %)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경상적수입 ¹⁾	임시적수입 ²⁾	소계	사업수입 ³⁾	사업외수입 ⁴⁾
268,533	124,874	72,640	44,172	143,658	105,941	14,424
100.0	46.5	27.1	16.4	53.5	39.5	5.4

주: 1)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2) 재산매각, 부담금, 기타수입 등

3)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익 등

4) 고정자산 매각 수입, 투자자산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도 단체별 세외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계	시·도					시·군·구			
	소계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소계	시	군	구
268,533	113,882	89,436	2,282	18,132	4,031	154,651	102,442	20,774	31,435
100.0	42.4	33.3	0.8	6.8	1.5	57.6	38.1	7.7	11.7

자료: 행정안전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2022.6.21.)

-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
 -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
-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음
 -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 **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음
- 분양가 제도 연혁은 다음과 같음
 - 분양가규제는 1977년부터 ‘분양상한가’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작되었으며,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1989년 11월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 시행
 -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1999년 1월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 외는 분양가규제 폐지
 - 2000년대 초반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분양가가 급등하여, 2005년 3월 9일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양시장 침체가 심화되어 2015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중단되었으나, 2020년 7월 30일부터 서울과 광명·하남·과천 등에서 다시 시행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
 - (개선)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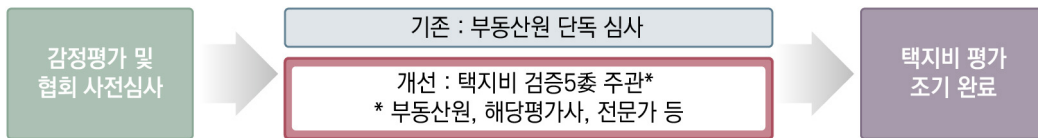
現 미반영 비용	개념	반영방식
① 주거이전비(재개발)	· 임차인, 현금청산소유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 법정 금액 지출내역 반영 (토지보상법)
② 영업손실보상비(재개발)	· 상가 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	
③ 명도소송비(재개발+재건축)	· 세입자, 현금 청산소유자 등 이주 관련 소송·집행비용	· 소송집행 소요 실제 비용 반영
④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재개발+재건축)	·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 산식으로 상한 설정
⑤ 총회운영비 (재개발+재건축)	·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 (현행) 기본형건축비는 정기고시(3, 9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시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도입('08.7)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
 - (개선)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에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
 - PHC 파이프,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
 -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

●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현행)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
- (개선)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기준*도 보다 구체화

* 정성평가 기준(예: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구체화 등



● HUG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 방안

- HUG도 자재비 급등 탄력 반영, 심사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
 -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
 -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춰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시 HUG의 세부 평가기준, 배점 공개 등도 추진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되고 있으나, 분양가 제도 개선에 따른 주택공급 및 아파트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 중 전년 동월대비 4.8%까지 상승하고 근원물가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당분간 높은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¹⁾ 아파트 건설 기간 중의 물가상승 리스크*를 고려할 때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음

*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기간 중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변동되지 않음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안태훈 예산분석관(02-6788-4747)

1) 국회예산정책처, 「2022 경제전망」, 2022.5, p.23.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발표(2022.5.31.)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에 따라 소 부처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시*

* 소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부가 관련 사업의 현황 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등을 제시(2019년 신규 도입)

- 중소기업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예산 5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 (2021년 기준)으로, 12개 부처, 137개 사업, 23조원 규모
- 평가대상 사업은 지원 목적·방식·대상 등에 따라 금융, 기술 등 8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추진

* 평가 분야별(3인)로 운영하여 정성·정량 평가 및 평가 등급 제시

평가분야별 세부사업 현황

(단위: 개)

분야	금융	기술	인력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인프라	합계
사업수	18	36	11	17	15	23	6	11	137

자료: 중소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2022. 5.)

- 사업평가 방식은 정성평가(60점)와 정량평가(40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동일 분야 내 상대평가로 3단계 등급* 부여

* 재정사업자율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우수(20%), 보통(65%), 개선 필요(15%) 부여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결과 현황

-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25개(18%), 보통 92개(67%), 개선 필요 20개(15%)

(단위: 개)

분야(등급)	금융	기술	인력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인프라	합계
우수	3	7	2	3	3	4	1	2	25
보통	13	24	7	11	10	16	4	7	92
개선필요	2	5	2	3	2	3	1	2	20
합계	18	36	11	17	15	23	6	11	137

자료: 중소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2022.5.)



주요 분야별 성과평가 결과 요약

- **(금융 지원) 정책자금 지원업종·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동성·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정책자금에 민간자본 후속 투자 연계로 지원기업에 추가 성장동력 제공
 - (문체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업종 추가(겨울스포츠 관련 도소매, 임대업 등) 및 운전자금 한도 상향(2억원 → 10억원), (고용부) 산재예방지원으로 고용유입 촉진(사업장 당 2.1명 고용증가)
 - (산업부) 부산지역 태양광 발전회사에 정책자금(135억원)과 은행자금(29억원) 연계지원, (중기부) 정책자금 지원 이차전지업체에 민간투자(110억원)가 추가되어 코스닥 상장(2021.11)

※ (보완방향) 정책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심사조건 완화 등 신속 지원 및 지원 사각지대 방지에 노력할 필요
- **(기술 지원)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수입대체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 및 역수출을 도모하고, 대학·연구소 기술이전 확대, 대·중소기업 공동투자 연구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산업부) 소·부·장(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개선(2019년 30.9% → 2021년 24.9%), (중기부) 무선 주파수(5G RF) 필터 역수출
 - (산업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증가(2019년 1,184건 → 2021년 1,278건), (중기부) 대기업 공동투자 연구 확대(2020년 12개 → 2021년 20개)

※ (보완방향) 출연연 등 우수기술의 기업 매칭 강화 등 외부기관 협력 강화 및 동일분야 연구개발(R&D) 과제 간 연계를 통해 유사 기술개발 과제 간 교류 확대 필요
- **(인력 지원) 인력 수급이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유지·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재해감소 및 건강권 확보**
 -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2021년 30인 미만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각각 96%, 79%로 확대, 끼임·추락사고 사망 상위 3대 업종에 안전 투자지원 추가, 특수건강진단 확대(2019년 28만명 → 2021년 36만명)

※ (보완방향)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교육이 현장 및 실무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실무·실습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분산된 교육과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마련 필요
- **(창업 지원)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 창업으로 기술기반 창업이 증가**하고, TIPS 등을 통한 **후속 투자·보육, 대기업 멘토로** 창업기업 성장 지원
 - (기술창업) 2019년 202,607개에서 2021년 239,620개로 증가, (중기부) 아기 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하) 60개 기업을 선정하고, 1,093억원 유치, (과기부) 대기업과 스타트업 1:1 연계

※ (보완방향) 원천기술은 있으나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T 관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분야(의료, 교육, 콘텐츠 등)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적극 연계할 필요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교육 → 점포경영 체험 → 사업화 일괄 지원 추진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폐업 상환 부담 완화 브릿지 보증 출시, 보증공급 확대(2019년 14조원 → 2021년 25조원),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지원(8,600억원),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 기름 음료 카페(들깨기름을 활용한 음료개발) 등 성공사례 발굴
- ※ **(보완방향)** 소상공인 활용이 가능한 맞춤형 기술개발·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최신 고급기술 위주의 실험적 보급은 자제할 필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개선방향

- 기존의 평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생존·유지 등에 중점을 둔 반면, 향후 지원기업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편 추진** 계획
 - (문제점)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제도의 혁신성장 노력·성과에 대한 지표 미비, 평가제의 사업(예산 50억원 미만)이 상존하여 평가의 사각지대 발생,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등 결과 활용 저조, 및 서면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 전문성의 한계 상존
 - (개선방향) 지원기업의 혁신기반 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편,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확대, 대면평가 방식의 추가 도입 등 종합적인 평가제도 개선방향 제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개편 방향

구분	현행	개편
평가관점	지원기업 생존·유지 중심	지원기업 혁신 기반 성장·성과 중심
평가대상	전 부처 중소기업 중 예산 50억원 이상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결과활용	예산 참고자료로 활용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규정 반영
평가방식	서면 평가	서면 + 대면 평가
평가지표	수 사업에 동일 평가지표 적용	평가분야·사업별 특성화 지표 적용 * 금융, 인력, 기술, 창업 등(8개 분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2022.5.)



사업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여부 등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 점검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018.6월)에 따라 2019년부터 신규 도입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제도가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이 원활하지 않고 평가방식의 한계에 따라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함
 - 따라서 정부의 평가제도 개편방향에 따른 향후 제도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취지와 같이 쏠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탄소중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에너지 중요성 증가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¹⁾ 선언이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 정부는 2022년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원전생태계,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등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를 포함
 - 국정과제 3.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에너지 및 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및 주요 내용(22.5.)

국정과제	주요 내용
③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원전의 적극적 활용) '30년의 원전 비중 상향,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원전 산업계 일감 조기 창출,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 R&D 집중 추진 •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관련 특별법 마련,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 추진,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 철저 확인 등
②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에너지믹스) 에너지 믹스의 합리적 조정 및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에너지공급망) 자원안보 범위 확대, 비축확대·수입국다변화·재자원화를 통한 수급안정성 제고 • (에너지신산업) 태양광·풍력 산업 고도화,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⑧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30 NDC 준수, 부문별 현실적 감축수단 마련 및 법정 국가계획 반영 •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원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 검토 및 증가수입의 기업 감축활동 지원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 확대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녹색분류체계 보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 (녹색산업·기술육성)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주: SMR은 Small Modular Reactor의 약어로 다양한 중소형원전을 의미하며,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로 약어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비재무적 요인을 통칭

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를 바탕으로 재구성

1)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또는 탄소)의 배출량과 흡수·제거되는 양을 같도록 하여 순배출량이 0(Net-Zero)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탄소중립경제 사업 예산안 분석」, 2021.10.).



정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심의·의결(2022.7.5.)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7.)²⁾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① 원전 비중 확대, ②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및 ③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성장을 정책 목표로 설정
 - 원전 비중 확대: 27.4%(‘21년) → 30%이상(‘30년)³⁾
 -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81.8%(‘21년) → 60%대(‘30년)
 -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성장: 2,500개(‘20년) → 5,000개(‘30년)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 의미⁴⁾
 - 기존의 단계적 원전 감축 정책 대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 공식화(‘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제시 등)
 - ‘22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확정(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 마련 등)
 -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및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5대 에너지정책 방향
 - 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 ②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③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④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⑤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확정·발표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공청회(‘22.6.21.), 에너지위원회(‘22.6.23.) 등 총 20여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차관회의(‘22.6.30.), 국무회의(‘22.7.5.)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음(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2022.7.)

3)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확대 목표인 30% 이상은 ① 2030년 발전량은 현재 NDC 기준, ②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라는 가정 하에 산정(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2022.7.)

4)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2022.7.

새정부 에너지정책 5대 정책방향 및 주요 내용

5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 내용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 실현가능성, 국민 수용성,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⁵⁾에서 에너지 믹스 구체화 → 재정립된 에너지 믹스를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반영 •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속운전 등 원전 비중을 '30년 30% 이상으로 확대 • (재생에너지)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석탄·LNG) 석탄발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에너지도 활용 • (전력망)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및 민간중심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 추진 • (법제정)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안보체계 구축 • (공급망) 비축·도입·재자원화 등을 연계한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 (자원개발)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 에너지 공급 중심 → 수요효율화 정책으로의 전환 추진,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한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 시장구조 확립 • (효율)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 (전력시장·요금)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전기요금 체계 확립 • (거버넌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통한 수출 산업화,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 (원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수출산업화 및 유망기술 확보 • (수소)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태양광·풍력) 태양광·풍력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 (에너지 신산업)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 (제도)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민·지역 기반 에너지 정책 확대 →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에너지 복지) 필수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 (주민·지역) 주민·지역과 협력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수용성 제고 • (안전)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022.7.)을 바탕으로 재구성

5)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추진방향이 논의되는 등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전라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등을 거쳐 2022년말 발표될 계획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 2021.1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후속계획 수립 필요

-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2022년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4~15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기적인 에너지 관련 계획
 -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수립된 제1~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4~15년을 계획기간⁶⁾으로 설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주요 후속조치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적인 계획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계획 설계 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
 -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7항⁷⁾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5항⁸⁾에서는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변경 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손동희 예산분석관(02-6788-4660)

6) 제1차~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4년, 제3차~제9차의 경우 15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음

7)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정부,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2022.6.26.)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0.6월)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 저소득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제도 밖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2차 고용안전망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I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을 지원하는 II 유형 사업으로 구성
- 제도시행 첫 해 43.2만명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 지원
 - 과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의 약 2배 규모의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으나, 잠재적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목표인원 64만명(추경 기준)에는 미달
 - 소득지원과 관련하여 청년 등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반면,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 남성 집단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한계
- 정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향후 5개년의 운영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2022.6월)
 - 기본계획에는 구직자 취업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취업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안, 그밖에 구직자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고용안전망을 공고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를 두 축으로 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추진과제1) 지원이 필요한 많은 국민을 지원
 - 청년,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재산이나 취업경험, 연령요건을 확대하고 재참여 제한 기준을 완화(3년 → 2년)하여 지원기회를 확대
 - 복지멤버십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소득·재산요건별 잠재적 대상자에 대한 집중 홍보 강화, AI를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참여자를 선제적으로 모집·발굴
 - 장기적으로 I, II유형 통합 여부 검토 및 직접일자리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개선
- (추진과제2) 지원받는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
 -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추진, 지급기간 중 소득활동 제한규정 개선 등 안정적 구직활동을 위한 소득보장 여건 개선
 - 직업훈련 기간을 취업경험 요건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소득여건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등 급격한 경제·고용환경 변화 시 종전 참여자격·수준을 상향하는 한시적 지원(가칭 특별국민취업지원제도) 마련 검토
- (추진과제3)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 및 상담사의 적극적 활성화
 - 수당지급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구직활동을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
 - 구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 지표를 개편하고 취업알선 전담팀을 운영하고 맞춤형 구인정보 제공 등 알선취업 지원을 강화
- (추진과제4) 더 제대로, 내실있게 취업지원 제공
 - 참여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제고, 다양한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강화, 사례관리 강화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도모
 -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화를 통해 성과분석·환류체계 강화

- (추진과제5)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역량 강화
 - 서비스표준안 개발 등 서비스 지원 체계화, 상담사의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취업지원 역량 강화, 상담사의 업무의욕 고취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운용 등을 통해 고용센터 상담의 질 제고
 - 상담사 교육 강화, 성과평가 결과 환류, 관리체계 합리화 등 민간위탁기관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품질관리를 강화
 - 유관기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협업유인 강화, 평가지표 신설,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업을 강화
 -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알선·직업훈련 지원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체계화된 디지털 고용서비스 제공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주요내용	
기본방향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공고화	
지원이 필요한 많은 국민을 지원	• 취업취약계층 보호 확대	청년 연령·재산요건 확대, 장기 구직자 참여요건 확대 검토
	• 적극적 참여 여건 조성	선제적 모집·발굴, 지원유형 정비, 재참여 제한 완화
지원받는 국민을 더 두텁게 지원	• 지원수준 개선	수당액 차등화 검토, 수당 지급기간 차등화 검토, 소득발생 시 지급정지요건 개선
	• 지원요건 개선	취업경험요건 개선, 특별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질화 및 상담사의 적극적 활성화	• 구직노력 지원체계 합리화	조기 취업노력 지원, 취업역량평가 전면 개선
	• 상담사의 적극적 지원 강화	구직활동 이행기준 합리화 및 단계별 구직의사 확인, 알선취업지원 강화
더 제대로, 내실있게 취업지원 제공	• 전방위적 취업지원 내실화	수요자 중심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업종별 취업 지원 연계 강화, 취약계층·청년 특화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내실화, 지역사회 협업 강화
	• 성과분석·환류 강화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정기 성과분석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역량 강화	• 고용센터 상담의 질 제고	서비스표준안 개발, 상담사 역량제고 및 업무몰입 지원
	• 위탁기관 역량강화 지원	상담사 교육강화 지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위탁·유관기관 연계·협업 강화	협업유인 강화, 성과평가 체계화
	• 온라인·원스톱 고용서비스	비대면 상담확대 및 고용24 구축, AI 활용 강화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필요

- 운영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 내실화 필요
 -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안내 등을 통해 참여율 제고 노력 필요
 - 제도 개선과제의 적극 추진을 통해 취업성과를 제고함으로써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내실화 필요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기획재정부, 350개 공공기관¹⁾의 2021년도 재무결산 결과 공시 발표 (2022.4.29)

- 공공기관의 2021회계연도 자산총액은 969조원, 부채총액은 583조원, 당기순이익은 10.8조원이며, 2020년 대비 2021년 총 자산은 71.4조원 증가(8.0%)
 -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자산 건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발전설비 투자 증가, 한국가스공사의 재고자산 및 채권 등 자산 증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상품(HMM) 평가이익,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 투자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임
- 공공기관의 2021년 말 부채 총액은 583조원으로 2020년 말 대비 41.8조원(7.7%) 증가함
 - 2021년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 증가 13.3조원은 건설투자비 및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사채 발행 등 금융부채 증가(10조원), 원전사후처리복구충당부채 등 비유동충당부채 증가(2.5조원) 등에 기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공사를 위해 금융부채 3조원 증가함에 기인하며, 한국가스공사는 환율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매입채무 증가(1.8조원) 및 사채 및 차입금 4조원 증가함
- 공공기관 총 당기순이익은 2017년 7.2조원 이후 2018년 0.6조원 및 2019년 0.8조원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5.2조원, 2021년 10.8조원으로 증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손익이 2020년 1.6조원에서 2021년 3.8조원으로 2.2조원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 2021년 당기순이익 전년도 대비 1.6조원 증가, 한국석유공사의 2021년 당기순손실 전년도 대비 2.4조원 감소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2017~2021년)

(단위: 조원, %, %p)

구 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 감(C=B-A)	증감률(C/A)
자산	806.9	824.8	857.5	897.6	969.0	71.4	8.0
부채	493.2	501.1	524.7	541.2	583.0	41.8	7.7
당기순이익	7.2	0.6	0.8	5.2	10.8	5.6	107.7

주: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아닌 BIS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함에 따라 상기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 산정 시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4.29.

1)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 등 총 350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동 350개 기관의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를 공시함



- 공공기관 재무결산에서 제외된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1년 말 부채 총계는 745.1조원으로 2020년 대비 61.0조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 당기순이익의 총합계는 4.23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0억원 증가하였음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2019~2021년)

(단위: 조원)

구 분		2019	2020(A)	2021(B)	증 감 (B-A)
부채	한국산업은행	233.8	264.0	287.7	23.7
	한국수출입은행	79.1	83.6	86.8	3.2
	중소기업은행	295.3	336.5	370.5	34.0
	합계	608.2	684.1	745.1	61.0
당기 순이익	한국산업은행	0.28	1.96	1.32	△0.64
	한국수출입은행	0.43	0.10	0.48	0.38
	중소기업은행	1.61	1.55	2.43	0.88
	합계	2.32	3.61	4.23	0.62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1년 말 평균 BIS 비율은 14.86%로, 일반은행 평균 BIS비율 16.55%에 비해 1.69%p 낮은 바, 일반은행과의 차이는 2018년 이후 202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BIS 비율 현황 (2017~2021년)

(단위: %, %p)

구 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 감(B-A)
한국산업은행	15.26	14.80	14.05	15.96	14.88	△1.08
한국수출입은행	12.90	14.42	14.56	15.09	14.84	△0.25
중소기업은행	14.20	14.50	14.47	14.82	14.85	0.03
3개 은행 평균 (a)	14.12	14.57	14.36	15.29	14.86	△0.43
일반은행 평균 (b)	15.84	15.90	15.89	17.14	16.55	△0.59
차이 (a-b)	△1.72	△1.33	△1.53	△1.85	△1.69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조항²⁾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형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정책금융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³⁾

2)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거나(임의적 손실보전), 보전하여야(의무적 손실보전) 함

2021년 공기업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증가

- 2021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0.8조원인데 반해 36개 공기업은 1조 8,41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함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전력 및 가스 원료(유연탄, LNG)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해 원료비가 증가하였으나, 동 원가상승분이 공공요금에 제한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20년 대비 2021년 부채규모 증가(각각 13조 3,218억원 및 6조 3,759억원)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2021년 부채가 18조 6,608억원(2020년 대비 6,519억원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이 287.3%(2020년 대비 39.5%p)로 증가함

주요 공기업(연결 기준)의 재무 현황 (2020~2021년)

(단위: 억원, %, %p)

구분	당기순손익			부채		부채비율	
	2020(a)	2021(b)	증감(b-a)	2021	2020 대비 증감	2021	2020 대비 증감
한국전력공사	20,925	△52,292	△73,217	1,457,970	133,218	223.2	35.8
한국가스공사	△1,607	9,645	11,252	345,506	63,759	378.9	14.6
한국철도공사	△13,427	△11,552	1,875	186,608	6,519	287.3	39.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2022.7.29.)

- (추진배경)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등 목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
 - 최근 공공기관은 조직·인력, 부채규모가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지표는 낮아지는 추세
 - ※ 공공기관 인력 2017년 5월 33.4만명 → 2022년 5월 44.9만명 (+11.5만명) / 공공기관 부채규모 2016년 말 499.4조원 → 2021년 말 583.0조원 (+83.6조원)
 - ※ 공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 이자비용) 1미만 기관 수 2017년 5개 → 2021년 18개
 -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① 생산성 제고 ② 관리체계 개편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① 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
- (추진방향)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점검·조정하여 확정 후, 기획재정부 혁신 T/F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점검·평가
 - 각 공공기관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① 기능, ② 조직·인력, ③ 예산, ④ 자산, ⑤ 복리후생의 5대 분야의 효율화를 목표로 혁신계획 수립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중점 분야

분 야	내 용
기능	•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및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기간간 유사·중복 기능 축소
조직·인력	•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등을 통해 조직·인력 슬림화
예산	• 업무추진비·여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자산	• 불요불급 자산 매각,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정비
복리후생	•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사내대출, 선택적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사택 관리비 등)을 점검하여 합리적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보도자료, 2022.7.29.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각 분야별 효율화 과제

- (기능조정)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및 조직·인력 정비
 - 당초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민간부문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예시) 숙박 시설 운영, 민간 수행 가능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 등 축소
 - 지자체 업무의 단순위탁 수행 등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예시)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 축소
 - 고유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예시)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의 원칙적 폐지
 -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시장수요·정책방향 전환 등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예시)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업무, 특허문서전자화 업무, 대단위 간척지 조성, 저축은행 부실자산 회수 업무 등)의 축소
 -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하며, 최근 신설기관의 경우 타 기관 등과 유사·중복기능을 중점 점검
-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 정·현원차를 최소화 하며,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 효율화
 - 일정기간 지속적인 정·현원차 유지 시, 현원 초과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의 효율화 추진, 해외조직은 사업성과 및 서비스수요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축소
 -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에 따른 감축소요 감안,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하는 방향 검토
 -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 필수인력소요도 정·현원차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흡수 원칙
- (예산 효율화)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 임직원 인건비 효율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정비
 - 임원의 경우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고, 직원은 기관의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수준 조정
 - 직무 난이도, 보수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을 통해 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생산성·공정성 제고
 - 기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경상경비 최대한 절감
 - 2022년도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 및 업무추진비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2023년도에는 경상경비의 경우 전년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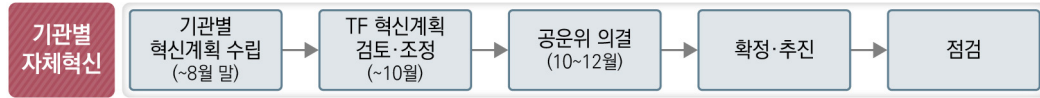


- (자산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및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헴자산,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투자손실 확대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 지분 정리
 - 공공기관 청사의 경우, 각 시설별 기준면적 등 초과시 축소, 유헴면적은 매각·임대 등을 추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자산가치 제고 방안 강구
 - 업무시설은 1인당 업무면적을 기준(56.53m²) 이하,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m²) 이하, 상임감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m²) 이하로 축소하며, 유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추진,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시설(축구장, 수영장 등)도 매각·임대·민간개방 추진
 -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유헴공간을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소재 기관의 경우 자산가치가 높은 청사는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복리후생 점검·조정)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수준을 정비
 -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 지양, 지원내용의 합리적 조정
 - (예시) 고교 무상교육 교육비, 영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 외 가산,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등
 - 개별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외부점검단인 사후 확인하며, 점검 결과를 알리이에 공시하고, 경영평가 등에 반영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향후 추진 일정

-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은 각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점검·조정 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하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향후 추진실적 점검
 -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T/F를 구성하여 5대분야 효율화를 위한 혁신계획을 수립(~8월 말)하며, 각 주무부처는 「산하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해당 혁신계획 점검·조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혁신계획을 검토, 조정(~10월)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기관별 혁신계획 심의·의결하여 확정(10월~12월)
 -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해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를 검토(~11월)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 점검 및 반기별로 공운위에 추진실적 보고(내년)
 - 기관장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혁신계획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반영하며, 각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관련 기획재정부 향후 추진 일정



자료: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보도자료, 2022.7.29.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수립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의 효과적·효율적 이행 필요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수립 목적인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각 기관별 적정 혁신계획 마련과 이의 효과적·효율적 이행 및 점검 필요
 -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해왔음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구 분	공공기관 관리정책	내 용
국민의 정부 (1998~2002)	1·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한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1998.7) 및 공기업 자회사 정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1998.8.) 발표, 추진
참여 정부 (2003~2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관련 법률 일원화	공공기관 범위 명확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등의 체계 정립, 공공 기관 주요 안건 심의 등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
이명박 정부 (2008~2012)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수반한 관리제도의 개편 도모 -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성과연봉제 확산,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확대 등) 수립 및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 마련
박근혜 정부 (2013~2017)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부채증가 및 방만경영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 (부채감축, 복리후생 정상화, 핵심업무로의 기능 재편 등)
문재인 정부 (2017~2022)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 전략 추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2020.7.) 발표를 통해 ①일자리, ②안전, ③윤리·공정, ④사회적 형평성, ⑤지역상생을 사회적 가치 실천의 5대분야로 선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도입(2022.8) 등 시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2.4.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재정동향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OECD, 2022년 6월 8일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

-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 회원국, G20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음¹⁾

세계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 2022~2023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 (2019) 2.8 (2020) △3.4 (2021) 5.8 (2022) 3.0 (2023) 2.8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 (2019) 2.0 (2020) 1.3 (2021) 3.7 (2022) 8.8 (2023) 6.1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봉쇄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12월 전망과 비교해보면, 세계경제 성장률을 1.5%p, 0.4%p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4.4%p, 3.0%p 상향조정함
-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 국가별 거시여건을 고려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국가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재정정책 등을 제언함
 - 저소득 국가 백신지원 통해 신규변이 확산 가능성 차단, 식량공급 관련 물류장벽 완화·수출통제 방지·국제원조 등 국제적 협력 권고
 -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가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결정
 -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분배 악영향에 대응하되, 재정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1) 3월과 9월 연 2회 중간 경제전망도 발표하는데, 이때는 세계경제와 G20 국가만 대상으로 함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을 2022년 2.7%, 2023년 2.5%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을 2022년 4.8%, 2023년 3.8%로 전망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2020) $\Delta 0.9$ (2021) 4.1²⁾ (2022) 2.7 (2023) 2.5
 -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2020) 0.5 (2021) 2.5 (2022) 4.8 (2023) 3.8
- 전세계, G20, OCED 평균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은 낮거나 유사한 수준,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
 - 2022년 전세계 경제성장률(3.0%), G20국가 평균(2.9%)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2.7%)과는 비슷한 수준임
 - 물가상승률은 2022년 기준 G20국가 평균(7.6%), OECD 평균(8.5%) 보다 낮은 수준
- 2021년 12월 전망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상향조정함
 - 경제성장률은 2022년 0.3%p, 2023년 0.2%p 하향조정하였으며, 세계경제 및 여타 OECD 회원국 성장률 조정폭에 비해 작은 수준
 - 2022년 성장률 조정폭(2021.12월 발표 대비): (한국) $\Delta 0.3$ (세계) $\Delta 1.5$ (OECD) $\Delta 1.2$ (G20) $\Delta 1.8$ (미국) $\Delta 1.2$ (영국) $\Delta 1.1$ (일본) $\Delta 1.7$ (중국) $\Delta 0.7$
 - 물가상승률은 2022년 2.7%p, 2023년 2.3%p 상향조정 하였으며, OECD, G20, 유럽국가들의 조정폭에 비해 작은 수준이나,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는 큰폭으로 조정
 - 2022년 물가상승률 조정폭(2021.12월 발표 대비): (한국) 2.7 (OECD) 4.4 (G20) 3.2 (독일) 4.4 (프랑스) 2.9 (영국) 4.4 (미국) 2.6 (일본) 1.1 (중국) 0.3
-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에 타게팅한 재정지원, 구조개혁, 공급망 복원력·에너지안보 제고 등 제언
 -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권고
 - 재정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타게팅하여 지원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실직자를 위한 직업교육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필요
 -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정부의 원전 부활 계획과 함께 배출권 총량 조정 등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조치가 필요

2)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정치 발표(6.8)에 따라 4.0% → 4.1%로 조정

경제성장률 전망 (G20국가, 「2022.6월 경제전망」)

(단위: %, %p)

구분 전망시점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2021.12월	2022.6월	조정폭	2021.12월	2022.6월	조정폭
전세계	5.8	4.5	3.0	△1.5	3.2	2.8	△0.4
OECD	5.5	3.9	2.7	△1.2	2.5	1.6	△0.9
G20	6.2	4.7	2.9	△1.8	3.3	2.8	△0.5
유로존	5.3	4.3	2.6	△1.7	2.5	1.6	△0.9
호주	4.8	4.1	4.2	+0.1	3.0	2.5	△0.5
캐나다	4.5	3.9	3.8	△0.1	2.8	2.6	△0.2
독일	2.9	4.1	1.9	△2.2	2.4	1.7	△0.7
프랑스	6.8	4.2	2.4	△1.8	2.1	1.4	△0.7
이탈리아	6.6	4.6	2.5	△2.1	2.6	1.2	△1.4
스페인	5.1	5.5	4.1	△1.4	3.8	2.2	△1.6
일본	1.7	3.4	1.7	△1.7	1.1	1.8	+0.7
한국	4.1 ¹⁾	3.0	2.7	△0.3	2.7	2.5	△0.2
멕시코	4.8	3.3	1.9	△1.4	2.5	2.1	△0.4
터키	11.0	3.3	3.7	+0.4	3.9	3.0	△0.9
영국	7.4	4.7	3.6	△1.1	2.1	0.0	△2.1
미국	5.7	3.7	2.5	△1.2	2.4	1.2	△1.2
아르헨티나	10.3	2.5	3.6	+1.1	2.3	1.9	△0.4
브라질	5.0	1.4	0.6	△0.8	2.1	1.2	△0.9
중국	8.1	5.1	4.4	△0.7	5.1	4.9	△0.2
인도	8.7	8.1	6.9	△1.2	5.5	6.2	+0.7
인도네시아	3.7	5.2	4.7	△0.5	5.1	4.7	△0.4
러시아	4.7	2.7	△10.0	△12.7	1.3	△4.1	△5.4
사우디	3.1	5.0	7.8	+2.8	3.0	9.0	+6.0
남아공	4.9	1.9	1.8	△0.1	1.6	1.3	△0.3

주: 1) 2021년 국민계정 잠정치 발표(6.8)에 따라 성장률 4.0% → 4.1%로 조정

자료: 기획재정부(원자료 : OECD)



물가상승률 전망 (G20국가, 「2022.6월 경제전망」)

(단위: %, %p)

구분 전망시점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2021.12월	2022.6월	조정폭	2021.12월	2022.6월	조정폭
OECD	3.7	4.4	8.8	+4.4	3.1	6.1	+3.0
G20	3.8	4.4	7.6	+3.2	3.8	6.3	+2.5
유로존	2.6	2.7	7.0	+4.3	1.8	4.6	+2.8
호주	2.8	2.7	5.2	+2.5	2.1	4.1	+2.0
캐나다	3.4	3.3	6.0	+2.7	2.1	3.9	+1.8
독일	3.2	2.8	7.2	+4.4	2.2	4.7	+2.5
프랑스	2.1	2.3	5.2	+2.9	1.4	4.5	+3.1
이탈리아	1.9	2.2	6.3	+4.1	1.6	3.8	+2.2
스페인	3.0	3.2	8.1	+4.9	1.5	4.8	+3.3
일본	△0.2	0.8	1.9	+1.1	0.8	1.9	+1.1
한국	2.5	2.1	4.8	+2.7	1.5	3.8	+2.3
멕시코	5.7	4.4	6.9	+2.5	3.3	4.4	+1.1
터키	19.6	23.9	72.0	+48.1	21.7	38.9	+17.2
영국	2.6	4.4	8.8	+4.4	2.4	7.4	+5.0
미국	4.7	4.4	7.0	+2.6	2.5	3.5	+1.0
아르헨티나	48.8	44.4	60.1	+15.7	38.3	50.6	+12.3
브라질	8.3	5.1	9.7	+4.6	3.5	5.3	+1.8
중국	0.8	1.7	2.0	+0.3	2.4	3.0	+0.6
인도	5.6	4.8	6.7	+1.9	4.2	6.5	+2.3
인도네시아	1.6	2.8	3.8	+1.0	3.1	3.8	+0.7
러시아	6.7	5.9	16.2	+10.3	4.4	13.3	+8.9
사우디	3.1	2.4	2.2	△0.2	2.0	2.7	+0.7
남아공	4.6	4.8	6.0	+1.2	4.5	5.8	+1.3

자료: 기획재정부(원자료 : 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IMF는 2022년 7월 2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WEO Update) 발표

- IMF는 세계경제가 2022년에는 3.2%(’22.4. 대비 0.4%p 하락), 2023년에는 2.9%(’22.4. 대비 0.7%p 하락)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과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식량위기 등의 영향으로 2022년도 성장률 전망값 감소
 - 다만, 예측보다 높은 2022년 1분기의 성장 결과가 이후의 성장률 감소 영향을 일부 상쇄하여, 2022년도 성장률 전망값 감소폭이 완만해진 것으로 평가

※ IMF는 매년 4월·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 1월·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을 발표

-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2년 2.3%(’22.4. 대비 0.2%p 하락), 2023년 2.1%(’22.4. 대비 0.8%p 하락)로 전망
 - 정부는 5월에 실시된 2차 추경(62조원)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WEO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폭이 세계경제 평균에 비하여 소폭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
 - IMF의 전망은 정부 및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2022년 주요국 성장 전망 조정폭

(단위: %p)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	선진국	세계
△1.4	△1.1	△0.9	△0.7	△0.6	△0.5	△0.5	△0.2	△0.8	△0.4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기관의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IMF (7월)	정부 (6월)	NABO (5월)	IB 평균 (5월)	한은 (5월)	OECD (6월)	Moody's (5월)	S&P (6월)	Fitch (6월)
2.3	2.6	2.6	2.8	2.7	2.7	2.5	2.6	2.4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 그룹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선진국은 2.5%(’22.4. 대비 0.8%p 하락)로, 신흥국은 3.6%(’22.4. 대비 0.2%p 하락)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 (선진국) 미국은 강력한 통화 긴축 및 구매력 하락으로 대폭 하향,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파급효과와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대폭 하향됨
 ※ (美) 2.3(△1.4%p), (獨) 1.2(△0.9%p), (佛) 2.3(△0.6%p), (英) 3.2(△0.5%p), (日) 1.7(△0.7%p)
 - (신흥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Zero-COVID) 정책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폭 하향, 인도는 대외여건 악화 및 빠른 통화긴축으로 하향
 ※ (中) 3.3(△1.1%p), (印) 7.4(△0.8%p), (러) △6.0(+2.5%p), (브라질) 1.7(+0.9%p), (멕시코) 2.4(+0.4%p)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경제성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22.4. 전망(A)	'22.7. 전망(B)	조정폭 (B-A)	'22.4. 전망(C)	'22.7. 전망(D)	조정폭 (D-C)
세계	6.1	3.6	3.2	△0.4	3.6	2.9	△0.7
선진국	5.2	3.3	2.5	△0.8	2.4	1.4	△1.0
-미국	5.7	3.7	2.3	△1.4	2.3	1.0	△1.3
-유로존	5.4	2.8	2.6	△0.2	2.3	1.2	△1.1
독일	2.9	2.1	1.2	△0.9	2.7	0.8	△1.9
프랑스	6.8	2.9	2.3	△0.6	1.4	1.0	△0.4
이탈리아	6.6	2.3	3.0	0.7	1.7	0.7	△1.0
스페인	5.1	4.8	4.0	△0.8	3.3	2.0	△1.3
-일본	1.7	2.4	1.7	△0.7	2.3	1.7	△0.6
-영국	7.4	3.7	3.2	△0.5	1.2	0.5	△0.7
-캐나다	4.5	3.9	3.4	△0.5	2.8	1.8	△1.0
-기타 선진국	5.1	3.1	2.9	△0.2	3.0	2.7	△0.3
한국	4.0	2.5	2.3	△0.2	2.9	2.1	△0.8
-신흥개도국	6.8	3.8	3.6	△0.2	4.4	3.9	△0.5
중국	8.1	4.4	3.3	△1.1	5.1	4.6	△0.5
인도	8.7	8.2	7.4	△0.8	6.9	6.1	△0.8
러시아	4.7	△8.5	△6.0	2.5	△2.3	△3.5	△1.2
브라질	4.6	0.8	1.7	0.9	1.4	1.1	△0.3
멕시코	4.8	2.0	2.4	0.4	2.5	1.2	△1.3
남아공	4.9	1.9	2.3	0.4	1.4	1.4	-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omy and More Uncertain), 2022.7.

- (인플레이션 전망) 전세계 인플레이션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2022년은 8.3%(’22.4. 대비 1.4%p 상승)로 전망하였으며, 선진국은 6.6%(’22.4. 대비 0.9%p 상승), 신흥국은 9.5%(’22.4. 대비 0.8%p 상승)로 전망
 - 다만, 통화완화정책 축소,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2022년 3사분기를 정점으로 2024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전망의 위험요인)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식품가격 상승, 임금상승 압력 증가, 통화긴축에 따른 신흥국 부채부담 증가, 새로운 코로나19 발병 및 중국의 봉쇄 심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등 하방 리스크 확대 가능성 존재
 - IMF는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전면 중단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2년 2.6%, 2023년 2.0%로 하락하는 부정적 시나리오도 추가 제시

IMF의 정책권고

-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두되, 국가별 물가 상승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통화·재정·구조개혁의 적절한 조합을 구사할 필요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단기적 비용(경제활동 감소, 실업 증가, 낮은 임금 등)을 감안하고, 실질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
 - (재정정책)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선별지원(targeted and temporary fiscal transfers) 등을 추진하되,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중립성을 갖출 필요
 - (구조개혁) ① 근로소득세 공제율 상향, ② 보육지원 자금 확대, ③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④ 이민경로 개혁 등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하여 생산성 증가 및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신흥국의 경우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녹색 투자 및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총공급 확대 필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

IMF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신흥국 은행의 자국 국채 보유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 - 은행 연계도 증가의 위험성(THE SOVEREIGN-BANK NEXUS IN EMERGING
MARKETS: A RISKY EMBRACE) 지적(2022.4.)

- IMF는 신흥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대해 신흥국의 자국 은행이 보유한 자국 국채 보유 비율 또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의 신흥국 국채 투자 비중은 감소하였다고 밝힘
 - 신흥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GDP 대비 52% 수준에서 67%로 증가
 - 신흥국 은행의 자국 국채 보유 비율은 은행 부문 자산(banking sector asset) 대비 14%에서 17%,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¹⁾에 비해서는 200%까지 증가
 - 신흥국의 자국 통화표시 국채발행량 중 자국 은행의 보유 비율이 증가(2005년 21.8% → 2020년 31.7%)하고 외국인 투자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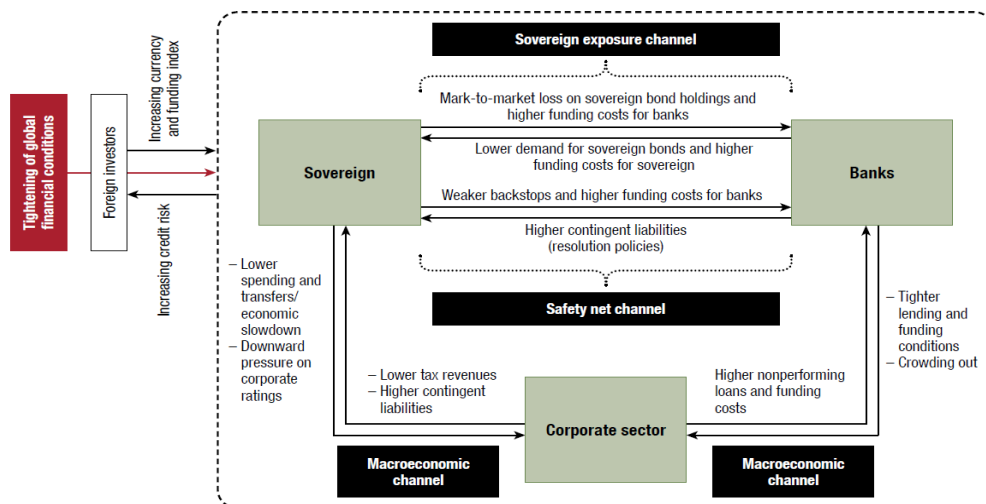
신흥국 정부와 은행 부문 간 연계도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충격이 은행 및 기업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 제시

- 신흥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자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신흥국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더욱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1~2026년까지에 대한 전망 결과 신흥국의 경우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해 세입 대비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9% 수준에서 약 12%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비해 선진국의 경우 현재 6%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21~2026년까지 신흥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67% 수준에서 2026년 7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비해 선진국은 점차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 은행의 규제자본(Bank total regulatory capital)은 바젤III 위원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새롭게 정의된 금융건전성 지표 중 하나임. 은행의 자본 가운데 가장 양질인 보통주 자본을 중심으로 은행이 보유한 자본의 양을 측정하여 은행이 가진 손실에 대한 흡수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 IMF는 정부-은행-기업 간 3가지 경로를 제시하며 신흥국 정부와 은행 간 연계도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신흥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금융 긴축의 여파로 국채 금리 상승 시 국채 보유에 따른 은행 부문의 손실 급증 등 재정충격이 은행 및 기업 부문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제시
 - IMF는 정부-은행-기업간 ① 자국 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 경로(sovereign exposure channel), ② 정부와 은행, 기업 간 세수 및 여신 축소 등 간접적인 거시경제 경로(macro-economic channel), ③ 은행 부문에 대한 정부의 안전망 경로(safety net channel)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긴축의 여파가 특히 신흥국 시장의 취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
 - ① 자국 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 경로에 따르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이 보유한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은행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은행의 국채 수요 감소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하여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② 정부와 은행, 기업 간 거시경제 경로에 따르면 재정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국 국채를 보유한 은행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대출 감소 등 여신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③ 은행 부문에 대한 정부의 안전망 경로에 따르면 은행의 재무 상황 악화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유사시 은행 부문 안정을 위한 채무 조정 등에 따른 정부의 채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IMF 정부-은행-기업의 재정충격 전이 가능 경로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2022.04)



IMF는 이러한 정부-은행-기업간 연계를 통한 재정충격의 전이 위험이 신흥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²⁾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국가별로 은행 부문의 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더불어 재정부문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

- 국채 보유 비중 증가에 따른 은행 부문의 취약성 증가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정부-은행-기업간 연계를 통한 재정충격의 전이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신흥국의 경우 특히 원자재 수입국(commodity-importing emerging markets)에서 글로벌 금융 긴축과 높은 원자재 가격 등에 의해 해당 경로를 통한 위험 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IMF는 각국 정부의 재정 취약도 및 금융 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거시-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 당국이 국가채무의 구조조정(sovrenign debt restructuring)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을 세울 것을 제안
 - 재정 상태가 건전하고 은행 부문이 발전된 국가의 경우, 글로벌 금융 긴축 상황에 대응하는데 있어 유리하나, 국채 발행 시 보다 장기의 국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 필요
 -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금융 시장이 자금 제약 하에 있는 국가의 경우,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재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준칙(sustainable medium-term fiscal plans) 등을 도입할 필요
 -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상환 비율이 높거나 높은 환율 변동성에 노출된 국가의 경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고 정부-은행 연계에 따른 부정적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적용할 필요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2년 Vol. 2 통권 제20호

발행일	2022년 8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경성문화사 / 02-786-2999

© 국회예산정책처, 2022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간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80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